

맬서스의 比例原則과 經濟倫理*

李 相 鎬**

논 문 초 록 :

이 글은 경제윤리 측면에서 맬서스의 대표적인 저작인 『인구론』과 『정치경제학 원리』의 상관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는 『인구론』에서 인구와 식량의 비례관계를 확보해야만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유효수요가 존재해야만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그는 신중한 생활태도라는 독특한 윤리에 기대 인구와 식량의 비례관계를 확보하면서, 적절한 소득분배를 통해 유효수요를 확보하는 방식을 모색한다. 그러나 그는 상층계급과 하층계급이 모두 신중하지 못한 생활태도, 즉 비윤리적 생활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면서도 하층계급에게만 신중한 생활태도를 요구한다. 그는 상층계급의 높은 구매력이 유효수요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지만, 하층계급의 신중하지 못한 생활태도는 지나친 인구증가로 빈곤문제를 일으키면서 사회전체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경제학을 ‘윤리에 대한 과학’으로 정의하면서도 상층계급의 비윤리를 허용할 정도로 윤리를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 셈이다. 여기서 윤리나 도덕은 자신의 독자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경제논리로 환원될 뿐이다.

핵심주제어 : 비례원칙, 신중한 생활태도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 B12

I. 서 론

맬서스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이론을 인구법칙이나 인구와 식량의 비례(proportion)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우와 유효수요나 전반적인 과잉생산(general glut)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의 이론에 기대어 생태계 위기나 빈곤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거나(소위 Neo-Malthusian) 그를 무한한 경제발전의 불가능성을 강조한 인물로 해석하는

* 시원찮은 논문을 꼼꼼하게 읽고 지적해 주신 두분 평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물론 최종책임은 필자에게 있다.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시간강사

것(J. A. Schumpeter, 1954, pp.565-566; E. Halévy, 1928, pp.236-247)¹⁾이 전자와 관련된다면, 그를 케인스와 비교하는 것(B. A. Corry, 1958, pp.38-40; R. P. Rutherford, 1987, p.182)은 후자와 관련된다. 아울러 인구법칙과 신학적 관점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J. M. Pullen, 1986a; D. L. Le Mahieu, 1986; S. Rashid, 1984)²⁾이 전자에 속한다면, 그가 (노동가치론이 아닌) 시장메커니즘으로 가격을 설명함으로써 마셜과 케인스로 이어지는 현대 경제학을 개척했다고 평가하는 것(S. Rashid, 1986)은 후자에 속한다.

이런 차이는 모두 맬서스를 『인구론』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경제학 원리』를 중심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점은 지금까지 그가 마치 이 두 가지 저작 사이에서 어떤 상관성도 확보하지 않은 인물인 것처럼 평가받았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그의 이론에서 인구와 식량의 비례관계가 유효수요 문제와 어떤 상관성도 갖지 않은 것처럼 평가받았다는 사실이다. Palglin의 지적처럼, “맬서스의 『정치경제학 원리』가 이론과 정책면에서 『인구론』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 준다”(T. R. Malthus, 1964, iii)는 평가가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구론』을 중심으로 맬서스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유효수요문제나 전반적인 과잉생산문제에 대해, 『정치경제학 원리』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인구와 식량의 비례관계나 생태계 위기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연 맬서스에게 『인구론』과 『정치경제학 원리』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일까? 인구와 식량의 ‘비례’관계는 유효수요나 전반적인 과잉생산문제와 무관한 것일까? 다시 말해 유효수요나 전반적인 과잉생산 문제는 어떤 ‘비례’관계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맬서스가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정치경제학의 위대한 결과는 모두……비례에 의존한다”(T. R. Malthus, 1964,

1) T. Sowell(1963, 193-199) 역시 맬서스의 경제발전관을 분석하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은 자연환경에 따라 경제발전이 제약당한다는 측면이 아니다. 소웰에 따르면, 리카도는 비교정태 분석을 통해 분배몫을 연구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만, 맬서스는 경제발전에 대한 동태적 연구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므로 후자에게 유효수요는 특정 시점에서 시장을 청산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한 조건이다.

2) 이는 모두 맬서스가 『인구론』 제1판(1798) 마지막 2개 장에서 인구법칙을 신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다가 2판(1803) 이후에 이 부분을 삭제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는 그가 『인구론』 2판 이후에도 신학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주요 논쟁거리다. 1830년에 출판된 『인구론 해설(A Summary View of the Principle of Population)』에서 그는 여전히 인구법칙을 ‘신의 뜻’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T. R. Malthus, 1953b, 180-181)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구법칙과 신학적 관점의 상관성은 쉽게 결론내기 힘든 주제일 것이다.

p.376)고 주장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기서 ‘비례’는 『인구론』에서 강조하는 ‘비례’와 다른 것일까? 이것들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면, 맬서스에게 ‘비례’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맬서스의 경제이론을 ‘비례’관점에서 재해석하면서 『인구론』과 『정치경제학 원리』의 상관성을 분석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맬서스에게는 ‘비례’관계라는 원칙이 합리적인 경제발전 방식을 결정짓는 핵심변수이며 이 관계를 확보해 주는 것은 ‘신중한 생활태도’(prudence)라는 독특한 경제윤리이다. 필자는 이런 관점에서 맬서스를 재해석하면서 그에게 ‘비례’원칙과 경제윤리가 어떤 상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이 상관성은 인구법칙, 경제발전, 유효수요 등과 어떻게 얹히는지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II. 맬서스의 윤리적 경제관

맬서스가 보기에 경제는 직접적인 생산유인만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직접적인 생산유인과 함께 정치적 요인과 윤리(또는 도덕)적 요인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정치체제와 윤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생산유인이 존재하기도 힘들 뿐더러 설령 그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안정된 정치체제가 소유권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고 경제행위자들이 적절한 경제윤리를 갖추었을 때 비로소 직접적인 생산유인이 작동되면서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이다(T. R. Malthus, 1964, pp.309-310). 그래서 그는 경제학을 ‘윤리와 정치에 대한 과학’으로 정의한다(앞의 책, p.1).

맬서스에게 정치와 경제윤리는 서로 독립된 영역이 아니다. 그에 따르면, 정치적 자유가 존재해야만 소유권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소유권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만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만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적절한 경제윤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재국가처럼 절대군주만이 소유권을 갖는 경우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보다 순간적인 쾌락(비윤리적 행위)만을 추구한다(T. R. Malthus, 1958b, p.143; 1964, pp.226-227). 그래서 그는 개인에게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체제만이 안정된 소유권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줌으로써 개인의 근면하고 성실한 태도를 정당하게 평가해 주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정치적 자유는 개인들에게 근면성과 성실성이

라는 윤리적인 생활태도를 유인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그럼 경제학이 '윤리에 대한 과학'인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경제윤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적절한 경제윤리가 없다면, 경제발전이 불가능한 것일까? 이런 의문을 해결하려면 먼저 맬서스의 공리주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흔히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원칙을 최고의 가치기준(공공선, 즉 공익)으로 취급하는 철학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그에게서 이 철학의 흔적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스스로 공리주의자로 자처한 적이 없으므로 '맬서스의 공리주의'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처럼 보일지도 모른다.³⁾ 물론 공리주의 흔적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효용이……도덕규칙 중에서 가장 확실한 기준"(T. R. Malthus, 1958b, p.217)이라거나 "(제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필자) 최상의 길은……국민의 다수집단(the great body of the people)이 소비하는 분야"(앞의 책, p.253)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서 그가 공리주의 효용원칙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원칙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몇 가지 문구만으로 맬서스를 공리주의자로 평가하기는 힘들다. 이를 위해 공리주의에 대해 좀더 살펴보자.

벤담에 따르면, 개인은 이기적인 주체이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공선은 이런 개인들의 행위를 통해 확보될 수 있다. 그렇다면 벤담에게 공공선, 즉 공익은 개인의 사익추구행위에 의존하는 셈이다(E. Halévy, 1928, pp.11-33; R. Harrison, 1983, pp.170-171). 그러나 이기적인 개인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벤담은 모든 사람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면, 사익과 공익의 조화가 달성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모든 사람이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기적인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만으로 공공선, 즉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

벤담은 바로 여기서 정부의 개입을 역설한다(P. Rosanvallon, 1979, pp.31-32; K. Polanyi, 1977, p.168; E. Halévy, 1928, pp.88-118). 정부의 역할은 이기적인 개인들을 좀더 이성적·합리적인 존재로 교화시키면서 최대다수의 행복으로 유인하는 것이다(R. Harrison, 1983, p.167). 이렇게 본다면, 벤담의 공리주의는 단순

3) 그래서 맬서스가 선악이라는 윤리적 기준에서 공리주의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철학이나 방법론 측면에서 다르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존재한다(T. Sowell, 1986).

히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취급하는 데 머물지 않고 정부의 개입을 통해 인위적으로 이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철학인 셈이다. 이기적인 개인은 정부개입을 통해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키면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원칙을 달성할 수 있는 이성적·합리적 주체로 전환된다. 그는 정부가 이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고안해 낸 법률과 제도 아래서 자신의 사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이다.⁴⁾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행복은 효용의 함수이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사익추구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효용극대화, 즉 효율성의 논리를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공의 윤리적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익만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그렇다면 합리성은 단순히 경제효율성의 논리에 그치지 않고 공익을 확보해 주는 윤리적 기준으로도 작동한다. 결국 그에게 합리성이란 이미 공익이라는 윤리적 기준에 맞추어 조정된 기준, 즉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익원칙에 맞추어 사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개입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정된 기준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는 합리성과 효율성 그리고 도덕성을 동일한 지평에서 이해함으로써 우리에게 경제학을 ‘윤리에 대한 과학’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⁵⁾

이렇게 공리주의를 사익과 공익의 인위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철학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댈서스는 공리주의자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인물이다. 그도 역시 벤담처럼 정부개입을 통해 이기적인 개인을 합리적·이성적인 주체로 전환시키면서 (인위적인)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모색하기 때문이다. 익히 알다시피 댈서스는 고드윈(과 콩도르세)과 논쟁하면서 자신의 윤리관을 발전시켰다.⁶⁾ 『인구론』

4) 이와 관련해서 벤담과 스미스를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벤담은 스미스처럼 이기적인 개인의 행위를 통해 공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스미스가 이기적인 개인의 자발적인 행동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공익으로 이어진다고 믿었다면, 벤담은 이기적인 개인의 자발적인 행동만으로 사익과 공익의 조화가 달성될 수 없다고 믿었다. 이런 점에서 벤담의 공리주의는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와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E. Halévy(1928, pp.89-118) 참조.

5) 이런 관점은 무엇보다도 벤담이 물질적 행복을 윤리적·도덕적 기준으로 취급한 데서 비롯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벤담처럼 행복을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생각하더라도 비물질적 행복까지 고려하거나 비물질적 행복이 물질적 행복보다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도덕과 경제논리(경제 효율성이나 경제 합리성)를 같은 지평에서 생각하기는 힘들다. 하물며 벤담과 달리 최고의 가치기준을 행복에서 찾지 않는다면, 도덕과 경제논리를 같은 지평에서 생각하는 일은 더욱더 힘들 것이다. 필자는 최근에 자유주의자, 공동체주의자, 공리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사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제윤리 논쟁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6) E. Halévy(1928, p.154)에 따르면, 이 논쟁에서 댈서스가 승리하면서 그의 관점이 정통공리주의로 정착했다.

초판의 부제(With Remarks on the Speculations of Mr. Godwin, M. Condorcet, and Other Writers)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맬서스에게 고드윈은 자신의 경제이론과 경제윤리를 세우는 데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이었으며, 이런 관점은 2판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두 사람 논쟁의 핵심쟁점은 정부개입의 의미와 사익과 공익의 조화가가능성을 이해하는 문제였다.

고드윈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도덕적·윤리적인 존재이다. 설령 비이성적·비합리적, 비윤리적인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사회가 발전하면 이런 행위는 점차 극복된다. 그렇지만 상속제도나 소유제도가 존재하면, 모든 사람이 소유욕에 사로잡혀 이기심을 추구하게 되므로 소유계급만 행복해질 뿐,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상속제도나 소유제도는 이기심만을 조장하면서 이성적·합리적·윤리적인 본성의 발현을 가로막는 인위적인 장벽이며 이를 극복하고 평등사회를 실현해야만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확보할 수 있다(E. Halévy, 1928, pp.209-223). 그래서 그는 정부가 상속제도나 소유제도라는 인위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인간의 이성적·합리적·윤리적인 본성이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줄 때, 비로소 무한한 경제발전, 곧 무한한 사회진보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맬서스에게 인간은 이성적·도덕적인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게으르고 순간적인 쾌락만을 좇는 존재(T. R. Malthus, 1964, pp.320-321)⁷⁾이며 “물리적 존재조건에 얽매인 생리적 존재”(E. Halévy, 1928, pp.275-276)이다. 그러므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리적인 자연세계와 생리적인 인간세계의 상관성, 인간의 비이성적·비윤리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 그의 인구법칙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의 산물이다(D. V. Glass, 1953). 그는 『인구론』 2판 서문에서 고드윈을 비판하면서 “당시 대중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던 인간과 사회의 완전성에 대한 사고의 진실성을 살펴보는 것”(T. R. Malthus, 1958a, p.1)이 자신의 서술의도라고 밝힌다. ‘인간과 사회의 완전성에 대한 사고’란 고드윈처럼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를 통해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확보하고 사회를 무한히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 관점을 지칭한다. 여기서 인간은 근면하고 신중하며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로 취급된다(J. A. Schumpeter,

7) 여기서 맬서스는 이런 인간관에 기대 세이의 법칙(Say's law)을 비판한다.

1954, p.257; E. Halévy, 1928, p.242). 맬서스는 이런 관점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소유제도나 상속제도를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가로막는 인위적인 장벽으로 보지도 않는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는 부를 '자발적 소유대상'으로 취급하면서 안정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경제발전이나 적절한 경제윤리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비이성적·비윤리적 존재라면, 그래서 인간이 게으르고 순간적인 쾌락만을 좇는 존재라면, 이기적인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만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거나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원칙을 확보할 수 없다. 아울러 인간이 물리적 자연조건에 얽매인 존재라면, 무한한 경제발전, 곧 사회진보는 불가능하다. 경제발전은 항상 자연환경에 따라 제약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맬서스는 바로 여기서 정부의 역할을 끌어 낸다. 정부는 게으르고 순간적인 쾌락만을 좇는 인간을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로 교육해서 물리적인 자연조건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간의 욕구를 실현하도록 유인해야만 한다. 그에게 이성적·합리적인 행위란 근면하고 성실한 행위이자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행위이며, 물리적인 자연조건에 맞게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는 이런 행위를 이끌어 내는 요인을 '신중한 생활태도'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맬서스의 '신중한 생활태도'는 경제발전을 유인하는 생활태도이자 합리성과 효율성을 앞당기는 생활태도이며, 자연조건에 맞추어 욕구를 조절하는 윤리적인 생활태도이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합리성과 효율성 그리고 도덕성을 한데 묶는 기준이며 경제학을 '윤리에 대한 과학'으로 만들어 주는 기준이다. 아울러 그것은 비합리적·비이성적인 개인들이 정부개입을 통해 합리적·이성적인 경제주체로 전환되면서 자신 속에 내면화시킨 경제적·윤리적 기준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부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맞게 비합리적·비이성적인 개인을 이성적·합리적인 경제주체로 전환시키면서 인위적으로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맬서스의 공리주의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그렇지만 맬서스는 어떠한 기준(공리주의나 수학적 판단기준)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는 정치경제학이 복잡한 인간생활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실용성을 지녀야 한다고 보면서 순수한 이론차원에서 경제문제에 접근하거나 복잡한 인간생활을 단순한 원리로 환원시키는 사람들을 비판한다.⁸⁾ 그에게 정치경제

학이란 실제 경제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규칙들을 제공하는 것이다(T.R. Malthus, 1964, pp.4-9).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실용적인 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 기준은 '신중한 생활태도'와 어떤 상관성을 갖는가?

이런 의문은 '정치경제학의 위대한 결과는 모두 비례에 의존한다'는 명제와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⁹⁾ 맬서스는 벤담처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원칙을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여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경제가 발전해야 한다. 맬서스에게 실제로 번영하는 사회는 경제영역에서 국부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사이에 정확한 '비례'관계가 확보된 사회이다. 그러므로 비례관계는 경제발전을 통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J. M. Pullen, 1986b, p.431). 그렇다면 '신중한 생활태도'는 마땅히 '비례'관계를 확보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전자가 단순히 개인의 윤리적 기준에 머물지 않고 현실적으로 경제전체에서 '비례'관계를 충족시키면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에게 '실용적인 기준'이란 바로 현실사회에서 '신중한 생활태도'를 통해 '비례'관계를 충족하면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한 경제적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맬서스가 인구법칙이나 유효수요와 관련해 비례원칙을 어떻게 설명하며 이 원칙을 신중한 생활태도라는 독특한 경제윤리와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살펴보자.

Ⅲ. 경제와 비례원칙

1. 인구법칙과 비례원칙

맬서스는 물리적 세계와 생리적 세계의 상관성을 인구법칙으로 묘사한다. 이 법칙에 따르면, 인구는 식량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속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 중에서 성욕은 정열(passion)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식주에 대한 욕망 다음으로 강렬해서 과용되기 쉽기 때문이다(T. R. Malthus, 1958b, pp.153-157). 그러므로 성욕의 원천인 정열을 억제하지 않으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8) 심지어 T. R. Malthus(1964, p.8)는 자신의 인구법칙 역시 확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9) 위에서 보겠지만, 맬서스에게 비례원칙은 다양한 영역(인구와 식량, 적절한 소득분배, 소비와 저축,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 농업과 제조업 등의 관계)을 포괄하는 기준이다. 이런 점에서 맬서스가 비례원칙을 일반적인 방법론원칙으로 취급한다는 폴랑의 지적은 타당하다(J. M. Pullen, 1986b, pp.420-425).

인간사회에 최악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정열을 인간사회에 대한 도덕적인 ‘악덕(vice)’의 원천으로 취급한다(T. R. Malthus, 1958a, pp.6-10).

맬서스는 성욕의 원천인 정열을 억제해서 지나친 인구증가를 막는 것에서 인구법칙에 대한 해법을 찾는다.¹⁰⁾ 그는 인구억제 요인을 궁극적인 억제요인(ultimate check)과 직접적인 억제요인(immediate check)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다시 자발적인 억제요인(preventive check)과 비자발적인 억제요인(positive check)으로 나눈다. 궁극적인 억제요인은 식량부족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인구가 인위적으로 억제되지 않았을 경우에 식량증가율에 따라 강제로 인구증가율이 조정되는 최악의 상황을 지칭한다. 자발적인 억제요인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이성적(합리적) 추론을 통해 인구를 억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적절한 결혼 윤리나 관습, 또는 성도덕에 기대 비정상적인 성행위(irregular gratification)를 삼가는 점에서 도덕적 억제(moral restraint)이다. 비자발적인 억제는 악덕이나 비참한 상태(misery) 때문에 인간의 자연수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인간만이 아니라 동식물까지 여기에 해당된다. 악덕이 비정상적인 성행위나 조혼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라면,¹¹⁾ 비참한 상태는 영양결핍, 빈곤, 심한 노동, 나쁜 작업환경, 전쟁, 전염병, 기근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앞의 책, pp.12-19). 그는 이 중에서 자발적인 억제요인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취급한다.¹²⁾

자발적인 억제요인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식량수준에 맞게 인구를 조절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식량증가율과 인구증가율의 비례관계를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이 관계에 맞추어 성욕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도덕적·

10) 흔히, 맬서스는 1803년에 출판된 『인구론』 2판(초판은 1798에 출판)에서 처음으로 ‘도덕적 억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위적인 인구억제에 대해 인정했다고 평가받는다. 이에 대해 소웰은 맬서스가 원래의 의도에서 조금씩 후퇴했으며, 이런 관점이 『정치경제학 원리』로 이어졌다고 본다(T. Sowell, 1986, pp.212-214).

11) T. R. Malthus(1958a, p.14, 주 2))에 따르면, 비정상적인 성행위나 조혼관습은 인구를 엄청나게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악덕’이다. 그렇지만 이 ‘악덕’은 궁극적으로 인간사회를 비참한 상태로 만들면서 인구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볼 때, 그는 직접적인 억제요인을 도덕적 억제, 악덕, 비참한 상태로 구분하면서도 비참한 상태를 악덕에서 비롯된 것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도덕적 억제와 악덕에서 인구억제요인을 찾는 셈이다. 다시 말해 그는 도덕이나 윤리차원에서 인구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12) 이런 설명은 맬서스 사후에 출판된 『인구론』 7판(1914)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맬서스는 1830년에 출판된 『인구론 해설』에서 자발적인 억제와 도덕적 억제를 구분해서 설명한다. 여기서 자발적인 인구억제는 출생률감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비자발적인 인구억제는 사망률증가를 통해 이루어는 것이며, 도덕적 억제는 신중한(prudential) 판단을 통해 인구와 식량의 비례나 균형관계를 확보하는 것이다(T. R. Malthus, 1953b, pp.143-155).

윤리적인 것이다. 그가 보기에 ‘자연적으로 건강한(naturally healthy)’ 사회일수록 이런 자발적인 억제요인이 비자발적인 억제요인보다 강력한 효과를 보이며, 그렇지 못한 사회(소위 ‘후진사회’)일수록 비자발적인 억제요인이 강력한 인구억제요인으로 기능한다(앞의 책, p.15, pp.20-25). 예를 들어 원시사회나 미개사회에서는 전쟁이나 파괴적인 질병이 지배적인 인구억제요인이지만 근대유럽에서는 자발적인 억제요인이 지배적인 요인이다(T. R. Malthus, 1953b, pp.157-159).

자발적인 인구억제, 즉 도덕적 억제가 이성적·합리적인 판단능력을 전제하는 것이라면, 문명사회는 곧 이런 능력의 산물이다. 아울러 비자발적 인구억제에 따라 인구가 조절되는 원시사회나 미개사회는 비이성과 비합리성이 지배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억제가 작동되지 않는 사회이다. 문명사회가 미개사회보다 부유한 사회라면, 부유함은 이성과 합리성의 산물이며, 빈곤은 비이성과 비합리성의 산물이다. 아니 부유함은 이성적·합리적 판단에 따라 인구를 식량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도덕적 억제방식의 산물이며 빈곤은 비이성적·비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인구를 식량상황에 맞게 조절하지 못하는 비도덕적 억제방식(비자발적 인구억제)의 산물이다. 이렇듯 맬서스는 인구법칙과 관련해 경제논리와 윤리를 같은 의미로 이해한다. 그가 보기에 경제가 발전된 문명사회일수록 적절한 경제윤리(신중한 생활태도)가 작동될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인구억제도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인구증가율과 식량증가율의 비례관계를 확보하는 것은 곧 경제합리성과 윤리를 동시에 확보하면서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키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보장하는 길이다.

맬서스는 고드윈과 달리 소유제도나 상속제도를 ‘악덕’의 원천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끊임없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취급한다.¹³⁾ 그에게 상속제도나 소유제도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져오는 유인이지 인간과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다. 그런데 결혼제도와 소유제도가 존재하는 한, 사회는 항상 소득불평등문제를 피할 수 없다. 소득불평등을 전제한다면, 인구가 식량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사람이 똑같이 빈곤과 기아문제로 고통을 겪지 않는다. 오로지 하층계급만이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겪을 뿐이다. 그렇다면 맬서스의 인구법칙은 단순히 “인구가 식량증가율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속성을 지닌다”¹⁴⁾는 점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빈곤을 과잉

13)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을 참조.

14) J. A. Schumpeter(1954, pp.254-258)에 따르면, 이런 속성은 맬서스가 발견한 것이 아니다.

인구로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맬서스'의 이론다운 특성을 지닌다(J. A. Schumpeter, 1954, p.257).

따라서 맬서스의 인구법칙은 주로 빈곤층에 국한된 문제이다. 물론 스미스처럼 국부가 증가하면 빈곤층의 생활수준도 향상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A. Smith, 1976, pp.86-87). 그러나 맬서스가 보기에 빈곤층의 생활수준은 국부증가가 아니라 노동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노동수요가 자본가가 지급하는 임금기금(the funds for the maintenance of labor)에 따라 결정된다면, 노동공급은 노동자의 숫자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임금기금은 식량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실질임금을 의미한다(T. R. Malthus, 1958b, pp.127; 1964, p.224) 맬서스가 보기에 스미스의 지적처럼 국부증가에 비해 실질임금이 향상되려면 (인구증가율보다) 농업에 대한 자본투자가 점점 더 증가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본가들은 대부분 농업보다 상업이나 제조업에 투자하기 때문이다(앞의 책, pp.127-136). 게다가 토지는 수확체감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하층계급의 생활수준은 하층민 스스로 인구를 식량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층민의 행복이나 불행은 인구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앞의 책, pp.20-21).

그래서 맬서스는 빈민법(poor law)과 같은 평등정책에 반대한다. 그가 보기에 이 정책은 '최대다수(인 노동자)의 최대행복'이란 명목으로 부자들을 희생시킴으로써 빈곤을 구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평등정책은 빈곤에 대한 공포감을 제거함으로써 인구를 더욱더 증가시키기 때문이다(앞의 책, pp.4-6).¹⁵⁾ 인구가 식량증가율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면, 곡물가격이 상승하면서 빈곤층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킬 것이다. 이는 결국 빈곤계층의 생활수준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평등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빈곤계층만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 것이다(T. R. Malthus, 1958b, p.27).¹⁶⁾ 그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고드윈을 비판한다. 고드윈은 평등정책이 인구과잉문제를 일으키면서 (빈곤계층만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를 '비참한 상태에 대한 공포(the fear of misery)'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보지 못한 것이다

맬서스의 『인구론』이 등장하기 200여 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언급했기 때문이다.

15) 빌즈는 맬서스가 산업사회에서 어떤 사회정책도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데서 『인구론』이 기여한 바를 찾는다(H. L. Beales, 1953).

16) 맬서스는 연소자 노동력도 인구과잉의 결과로 해석한다(T. R. Malthus, 1958b, p.131).

(앞의 책, pp.12-13).

맬서스에 따르면, 어떠한 평등정책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런 정책은 역설적으로 사익과 공익을 분리시키면서 '최대다수의 최대불행(?)'을 낳을 뿐이다. 그는 인구와 식량의 비례관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구를 조절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부를 증가시키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만이 빈곤층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면서 궁극적으로 사회전체를 '최대 행복'으로 이끌 수 있다. 결국 그는 인구와 식량의 비례관계에서 빈곤층만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행복을 찾는 셈이다.

2. 유효수요와 비례원칙

맬서스에게 경제발전은 곧 국부의 증가이다. "부는 (유용한 대상이므로 누구나 -필자)……자발적으로 소유하려는 물질적 대상"(T.R.Malthus, 1964, p.33)으로 구성된다. 이런 대상은 자본축적이나 기술혁신, 또는 비옥한 토지를 통해 증가된다. 그러나 그는 유용한 대상의 공급량이 늘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국부증가로 이해하지 않는다. 공급량의 증가가 국부증가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유효수요를 동반해야만 한다(앞의 책, pp.316-360). 유효수요를 동반하지 않는 공급능력은 수요부족, 즉 전반적인 과잉생산을 낳을 뿐이다. 그렇다면 국부는 단순히 생산, 즉 공급 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적절한 유효수요를 전제하는 것이며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상황에서 비로소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부의 크기는 생산물의 공급량만이 아니라 전국민의 수요와 구매력에 맞게 적절하게 공급되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앞의 책, p.301). 이렇게 볼 때, 국부증가, 즉 경제발전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인 부(*general wealth*)가 항상 유효수요에 따라 결정된다"(T. R. Malthus, 1964, p.363)는 그의 주장을 유효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공급되는 상황, 즉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해야만 한다.

부가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소유하려는 대상'으로 구성된다면, 그리고 소유권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면, 사유재산제도는 (고드윈이 본 것처럼) 이기심만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진보를 가로막는 요인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발적인 소유욕망의 산물이며 경제를 발전시키는 요인이다. 그런데 사유재산제도는 필연적으로 소득불평등문제를 일으킨다. 그렇다면 국부와 관

런된 유효수요는 단순히 국민전체의 총구매력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득분배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급이나 계층들 사이에 적절하게 소득분배가 이루어질 때 수요와 공급이 서로 균형에 이를 수 있다. 다시 말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적절한 소득분배를 전제한 것이다.¹⁷⁾ 멜서스가 ‘생산과 분배는 부의 거대한 두 요소’(앞의 책, p.371)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적절한 소득분배는 평등한 소득분배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서로 다른 계급이나 계층들 사이에 소득을 평등하지 않게 분배하면서도 그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평등하지 못한 소득분배율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 비례관계야말로 총생산물에 대해 적절한 유효수요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다. 멜서스는 재산보유수준에 따라 사회계급을 상층계급(the superior class), 중간계급(the middle class), 하층계급(the lower class)으로 나눈다. 여기서 상층계급은 지주계급(주로 대지주), 중간계급은 상공업자, 하층계급은 빈곤층(the poor, 주로 노동계급)을 각각 지칭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적절한 분배구조와 유효수요의 상관성에 대해 해명한다.

멜서스가 보기에 중간계급은 절약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생산한 것보다 적게 소비한다. 그러므로 중간계급만 존재한다면 수요부족문제나 전반적인 과잉생산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따라서 자신이 생산한 것보다 더욱 많이 소비하는 집단이 존재해야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초과공급(수요부족)으로 투자유인이 하락하면서 생산량이 더욱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주계급이 바로 이런 집단이다(앞의 책, pp.400-401)¹⁸⁾ 그렇다면 지주의 고소득은 수요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다. 다시 말해 (적절한) 소득 불평등은 국부증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다.

멜서스는 이 문제를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비례관계와 연결시킨다. 그에 따르면, 생산적 노동은 부의 생산에 기여하는 노동이며, 비생산적 노동은 그렇지 못한 노동이다(앞의 책, pp.36-49). 전자가 생산을 목적으로 상공업분야에 고용된 노동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소비를 목적으로 서비스분야에 고용된 노동을

17) 물론 ‘적절한 소득분배’는 멜서스의 용어가 아니다.

18) 멜서스는 이에 대해 “그러므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려면-역주) 자신들이 생산한 것 이상으로 물질적 부를 소비하려는 의지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지닌 집단이 존재해야만 한다. 분명히 지주는 (이런 집단에서-역주) 가장 대표적인 범주에 속한다”(앞의 책, p.400)고 한다.

의미한다. 그러므로 전자는 국부증가와 관련되지만 후자는 이와 무관하다. 그렇지만 후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수요부족이나 전반적인 과잉생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앞의 책, pp.406-413). 전자가 주로 중간계급에게 고용된다면, 후자는 주로 상층계급에게 고용된다.¹⁹⁾ 그렇다면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비례관계는 곧 중간계급과 상층계급의 소득분배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주에게 (생산적 노동자들의 숫자와 비교해 적절한 규모의) 비생산적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을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분배되어야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나친 소득불평등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 맬서스는 부가 소수(상층계급)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절한 구매력을 갖지 못한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직 사치품 산업에 대해서만 유효수요가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공산품은 국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품목이며 이것은 대부분 중간계급과 하층계급을 상대로 판매된다. 그러므로 계급별 소득수준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존재해야만 제조업이 발전하고 국부가 증가할 수 있다(앞의 책, pp.375-376). 게다가 그는 적절한 분배구조를 노동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취급한다. 적절한 임금수준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노동자에게서 근로의욕을 유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앞의 책, pp.364-365). 그렇다면 그에게 계급별 소득수준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를 확보하는 것은 공급능력과 구매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면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천인 셈이다.

하층계급의 소득수준이 너무 낮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 하층계급의 지나친 저소득은 구매력이 없는 인구집단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맬서스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수준에서) 임금을 후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기에 적절한 고임금은 무엇보다도 국부를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다.²⁰⁾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후하게 지불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왜냐하면, 부와 관련시켰을 때, 사회

19) 맬서스는 자본(capital)과 수입(revenue)을 구분하고 전자를 생산적 노동을 고용하는 기금으로, 후자를 비생산적 노동을 고용하는 기금으로 정의한다.

20) S. Hollander(1986, pp.195-200)에 따르면, 맬서스는 단순히 인구증가율과 식량증가율의 비례관계를 확보하는 것을 이상향(the ideal)으로 옹호한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인구와 식량의 비례관계를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상태와 '고'임금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한 인물이다.

의 다수구성원의 행복(the happiness of the great mass of society)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앞의 책, p.405) 그렇지만 그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생산한 것 이상으로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소비수준이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고 본다. 다시 말해 고임금은 적절한 수준을 지키는 선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만일 이 한계를 초과해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중간계급의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투자유인이 떨어질 것이며, 이는 결국 하층계급의 고용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앞의 책, p.405). 아울러 지나친 고임금은 장기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킴으로써 하층계급만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맬서스가 보기에 적절한 소득분배는 장기적으로 3계급의 소득을 상승시키면서 경제를 발전시킨다. 지주에게 적절한 고소득이 제공되면 국민경제 전체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면서 국부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중간계급과 하층계급에게 적절한 소득이 제공되어 공산품에 대한 유효수요가 확보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간계급에게 적절한 이윤율이 확보되면서 지속적인 축적유인이 생겨나며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제가 발전할 것이다. 또한 자본이 축적되면 노동수요(임금기급)가 증가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수준에서) 고임금이 지급될 것이다. 고임금은 인구증가를 통해 경작규모를 확대시킬 것이며, 경작규모 확대는 지대를 상승시킬 것이다. 지대상승은 지주의 구매력을 상승시키면서 경제를 더욱 더 발전시킬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호순환도 물리적인 자연조건과 인구법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노동계급의 임금수준은 노동수요만이 아니라 노동공급(노동자 숫자)에도 의존한다. 자본축적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면 경작규모가 확대된다. 그런데 경작규모 확대는 토지의 수확체감법칙에 따라 곡물가격을 상승시킨다. 곡물가격 상승은 실질임금을 상승시키면서 이윤율 하락과 지대상승으로 이어진다(앞의 책, pp.162-168). 그래서 맬서스는 “점차 노동자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이 이윤율을 하락시키는 유일하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원인”(앞의 책, p.327)이라고 한다.²¹⁾ 이런 상황에서 인구법칙까지 작동된다면, 인구증가와 경작규모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하락시킬 것이다. 이에

21) 맬서스는 이윤율제한원칙(limiting principle)과 이윤율규제원칙(regulating principle)을 구분한다. 전자가 농업의 수확체감법칙에 따라 실질임금이 상승해서 이윤율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면, 후자는 공산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서 이윤율을 떨어뜨리는 것이다(T. R. Malthus, 1964, p.271). 여기서 전자는 인구법칙과 연결된 것이며, 후자는 유효수요와 연결된 것이다.

따라 하층계급의 구매력이 하락하면서 제조업의 이윤율이 더욱 떨어질 것이다.

이윤율이 자본축적률에 의존하고 임금률이 자본축적과 인구규모에 의존한다면, 이윤율과 자본축적을 규제하는 법칙은 궁극적으로 임금률과 인구증가를 규제하는 법칙과 같은 것이 된다(앞의 책, pp.327-330). 이는 모두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인구법칙에 따라 결정되며, 토지에서 수확체감법칙이 작동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인구와 식량의 비례관계를 확보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합리적인 경제발전이란 개인과 사회가 모두 식량과 인구의 비례관계를 확보하면서 적절한 소득분배에 따라 부를 증가시키는 상황을 의미한다. 만일 과잉인구문제가 발생한다면, 아무리 자본이 축적되고 노동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지주의 소득만 향상되면서 3계급 사이에 소득수준의 적절한 비례관계가 파괴될 것이다. 이는 결국 사회 전체에 식량부족이나 빈곤문제를 안겨 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맬서스에게 온갖 유효수요 문제는 적절한 소득분배문제로 집약되지만 후자는 궁극적으로 인구와 식량의 비례관계가 확보되는 상황에서만 전자를 해결하는 열쇠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인구와 식량의 비례관계를 확보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도달하는 데 그 어느 비례관계보다 우선하는 조건으로 취급하는 셈이다. 이는 그가 토지라는 물리적 자연조건에 따라 경제발전이 제약당하는 상황에서 인구와 식량의 비례관계를 확보하면서 적절한 분배관계를 유지하는 방식만이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키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²²⁾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식량수준에 맞게 인구를 조절하면서 3계급 사이에 적절한 소득불평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는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신중한 생활태도'라는 경제윤리를 통해 간접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자.

22) 맬서스가 곡물법(corn law)에 대해 찬성했던 이유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가 보기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서는 농업과 공업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그런데 농업이 발전해야만 인구와 식량의 비례관계를 확보하고 상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그에겐 무엇보다도 '곡물법'을 이용해서 농업을 발전시키는 방식만이 빈곤이나 식량 부족문제를 해결하면서 농업과 상공업의 균형발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인 셈이다(T.R. Malthus, 1958b, pp.119-125).

IV. 비례원칙과 경제윤리

인구법칙이 타당하다면, 그리고 과잉인구가 정열을 억제하지 못한 결과라면, 빈곤계층의 행복수준은 물리적인 자연환경(식량)과 도덕요인에 따라 결정된다(T. R. Malthus, 1964, p.225). 그렇다면 비옥한 토지를 더욱 많이 확보하거나 빈곤계층이 도덕적 억제를 통해 인구를 적절하게 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빈곤계층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사회도 발전할 것이다. 여기서 맬더스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구억제이다. 아무리 비옥한 토지를 많이 확보하고 자본축적에 따라 노동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정열을 적절하게 억제하지 못하면 결코 국부를 증가시킬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국부를 증가시키면서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 행위자의 도덕적 특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취급한다(앞의 책, p.335).

맬더스에게 도덕이나 윤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먼저 ‘도덕적 억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도덕이나 윤리를 인구억제라는 아주 제한된 의미로 사용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도덕적 억제’는 신중한(prudential) 판단에 따라 결혼을 삼가면서 엄격하게 도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T.R. Malthus, 1958a, p.14, 주 1)). 그가 보기에 개인들이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결혼하는 것은 도덕적인 의무이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가 자식을 먹여 살리는 의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T.R. Malthus, 1958b, p.205). 그렇다면 그에게 윤리문제는 오로지 인구법칙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맬더스는 윤리나 도덕을 단순히 인구법칙에만 국한시키지 않는다. 앞서 지적했듯이, 그에게 온갖 유효수요 문제는 적절한 소득분배를 확보하는 문제로 집약되며 후자는 궁극적으로 인구와 식량의 비례관계가 확보되는 상황에서만 전자를 해결하는 열쇠로 기능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신중한 생활태도’는 식량상황에 맞게 인구를 조절하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는 도덕적인 인구억제와 근면하고 성실한 생활태도를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도덕적인 인구억제방식이 존재하지 않으면 근면성과 성실성이 확보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중한 생활태도’는 도덕적으로 인구를 억제하는 요인에 그치지 않고 근면성과 성실성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윤리적 요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이것은 인구와 식량의 비례관계와 적절한 소득분배를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인구증가에 따른 빈곤문제

와 유효수요부족에 따른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는 요인이다.

맬서스에 따르면, 평등정책은 가치 있는 일에 근면하게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존적인 존재로 전환시킴으로써 이들의 근면성과 절약의지를 약화시킨다. 이는 결국 빈곤계층의 행복에 대한 유인만을 약화시키면서 게으른 빈민만을 양산하는 꼴이다(앞의 책, pp.48-50). 이런 점에서 평등정책은 도덕적인 인구억제 방식을 작동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자 빈곤층에게서 근면성과 성실성이라는 경제윤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그것은 궁극적으로 빈곤계층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빈곤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빈민법과 같은 평등정책은 사회구성원 일부의 불행을 약간 경감시키는 대가로 이들을 비윤리적 존재로 만들면서 '악덕'을 사회전체에 확산시키는 것이다(앞의 책, pp.38-39, p.209). 이런 정책은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킬 수 없으므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

맬서스가 보기에 식량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구가 조절되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이다. 다시 말해 인구증가율과 식량증가율의 비례관계가 자연스럽게 작동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양심과 윤리에 따른 행동인 것이다(앞의 책, p.179). 물론 평등정책이 존재하지 않으면 빈곤층은 단기적으로 더욱 가난해질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점차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정열을 억제하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생활함으로써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는 단순히 인구를 증가시킨다는 점 때문이 아니라 빈곤층에게서 신중한 생활태도를 파괴한다는 점 때문에 평등정책을 비판했던 것이다(S. Hollander, 1986, pp.203-205).

그래서 맬서스는 생존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가 볼 때, 인구법칙이라는 자연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생존권을 인정하는 것은 곧 빈곤층만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T. R. Malthus, 1953a, pp.190-191). 그래서 그는 빈곤문제에 대한 해법을 평등정책이나 생존권차원에서 찾지 않고 경제윤리 측면에서 찾는다. 나아가 그는 하층계급이 신중한 생활태도를 갖게 되면 하층계급만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본다(T. R. Malthus, 1958b, p.215). 이런 점에서 그는 하층계급의 신중한 생활태도를 사회진보 요인으로 취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오직 지식과 신중한 생활태도를 통해서만 자신들의 생활조건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항상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T. R. Malthus, 1964, p.279). 따라서 "노동계급(하층계급-필자)이 근면성, 신중한 생활태도, 선견지명, 청결함을 유지하도록 유인하고 도와 주는 것은 이

계급만이 아니라 사회전체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다”(T. R. Malthus, 1958b, p.247). 심지어 그는 하층계급이 신중한 생활태도를 갖게 되면 다른 두 계급과 거의 비슷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T. R. Malthus, 1964, p.368).

이렇듯 맬서스에게 하층계급의 신중한 생활태도는 이 계급만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기준이다. 즉, 하층민의 사익과 사회전체의 공익을 조화시키면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다. 그렇지만 그는 하층계급이 자발적으로 이런 생활태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맬서스도 벤담처럼 정부가 개입해서 하층계급이 신중한 생활태도를 갖도록 교육할 때, 비로소 사익과 공익의 조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보장된다고 보는 셈이다(T. R. Malthus, 1958b, pp.48-50, p.69).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기묘한 비대칭성을 발견한다. 맬서스는 계급별로 경제윤리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본다. “흔히 진실되고 근면한 습관(virtuous and industrious habits)과 온갖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간계급이 가장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중간계급의 구성원일 수는 없다. 사물의 본성상 상층계급과 하층계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만일 하층계급이 줄어들고 중간계급이 늘어난다면, 모든 노동자들이 좀더 행복해지는 상황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앞의 책, pp.254-255). 이렇듯 그는 “모든 사람들이 중간계급의 구성원일 수는 없다”고 말함으로써 비중간계급(상층계급과 하층계급)이 중간계급의 생활태도인 근면한 습관(신중하지 못한 생활태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준다. 경제합리성과 윤리를 동시에 확보하는데 신중한 생활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이런 생활태도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일 것이다. 즉, 정부는 합리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상층계급과 하층계급에게 똑같이 이런 생활태도를 교육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상층계급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이 하층계급을 줄이고 중간계급을 증가시키면 하층계급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그래서 궁극적으로 사회전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비대칭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맬서스는 이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밝힌 적이 없는 것 같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암묵적으로나마 상층계급이 언젠가는 자발적으로 신중한 생활태도를 갖게 된다고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확보하는 데 굳이 상층계급의 신중한 생활태도까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믿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전자부터 살펴보자. 그는 신중한 생활태도를 갖추는 데

중간계급이 가장 유리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중간계급에게 유리한 상황—그 이윤이 무엇이든지 간에—이 변하지 않는 한, 상층계급은 자발적으로 신중한 생활태도를 지니지 못한다. 설령 상층계급이 중간계급과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전체에서 상층계급의 구매력이 지닌 의미를 고려한다면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 그에게 상층계급이 신중한 생활태도를 갖게 될 것이라는 믿음은 자기 모순을 의미할 뿐이다. 이와 달리 후자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의 유효수요 이론에서 상층계급이 (중간계급처럼 신중한 생활태도를 갖게 되어) 절약습관을 갖게 되면 사회전체가 유효수요 부족문제나 전반적인 과잉생산 문제를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비대칭성은 유효수요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인구법칙이 타당하고 물리적인 자연환경에 따라 경제발전이 제약된다면, 인구와 식량의 비례관계를 유지하면서 유효수요를 확보해야만 개인과 사회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다. 유효수요를 확보하는 문제는 적절한 소득분배를 전제한다. 이 중에서 지주는 자신이 생산한 것 이상으로 소비하는 집단이다. 그러므로 지주의 구매력은 지주 자신의 신중하지 못한 생활태도와 (지주에게 높은 소득을 보장해 주는) 사유재산제도의 합작품이다. 맬서스에게 사유재산제도가 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듯이, 지주의 구매력도 그러하다. 따라서 지주의 구매력은 신중하지 못한 생활태도, 즉 비윤리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빈곤층의 신중하지 못한 생활태도와 달리 국부를 증가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다. 다시 말해 경제발전을 위해 상층계급의 비윤리는 필수적이다.

맬서스가 보기에 하층계급은 '사회의 다수구성원'이며 이 계급의 빈곤은 그 만큼 유효수요 부족문제를 일으키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방해하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로막는다. 또한 그에게 인구와 식량의 비례관계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어떤 비례관계보다도 우선하는 조건이다. 게다가 과도한 인구증가 때문에 빈곤과 기아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주로 하층계급이며 이는 모두 이 계급의 신중하지 못한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그렇다면 '사회의 다수구성원'인 하층계급이 이런 생활태도를 확보할 때, 비로소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그는 신중한 생활태도를 하층계급에게만 요구했던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맬서스에게 신중한 생활태도라는 윤리적 기준은 다양한 비례원칙을 확보해 주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요인이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현실

적으로 경제효율성과 윤리를 모두 제공하는 '실용적인 기준'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층계급에게만 요구될 뿐, 상층계급의 비윤리를 허용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보편적인 도덕기준이 아니다. 결국 그는 경제학을 '윤리에 대한 과학'으로 정의하지만 특정 계급에게만 윤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자기한계를 갖는다. 이는 모두 그가 윤리를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²³⁾

상층계급처럼 신중하지 못한 생활태도를 갖고 있더라도 높은 구매력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집단은 윤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오로지 하층계급처럼 신중하지 못한 생활태도를 갖고 있으면서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집단만이 윤리적으로 문제될 뿐이다. 심지어 이 계급은 비윤리적 생활태도 때문에 경제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유나 생존권조차 인정받지 못한다. 결국 그는 도덕이나 윤리를 경제합리성과 효율성을 위한 도구로 취급함으로써 특정 계급의 비윤리를 허용할 정도로 윤리영역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는 마치 경제를 발전시키는 행위만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그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비례원칙 중에서 인구와 식량의 비례관계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취급했던 것이다.

V. 결 론

맬서스에게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최고의 가치기준이다. 그는 사유재산제도를 윤리적으로 정당하게 평가한다. 아울러 그는 인구법칙을 가정한다. 그렇다면 사유재산제도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존재하고 인구법칙 때문에 식량부족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키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그는 인구를 식량수준에 맞게 조절하면서 계급별로 적절하게 소득이 분배된다면, 개인과 사회의 부가 증가하면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인구와 식량의 비례, 적절한 소득분배라는 두 가지 비례원칙을 통해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한다. 여기서 전자의 비례관계가 후자의 비례관계에 우선한다.

23) Pullen(1986b, p.431)이 맬서스를 스토아주의자가 아니라 공리주의자로 해석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이는 오늘날 공리주의가 결과주의(consequentialism)라 비판받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지만 J.A. Schumpeter(1954, pp.578-581)²⁴⁾와 J.M. Pullen(1986b, pp.426-428)도 지적하듯이, 뮐서스의 비례원칙은 검증이 거의 불가능한 기준이다. 설령 개인이 자신의 식량사정에 따라 인구를 조절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해도 어떻게 '적절한' 소득분배를 확인할 수 있겠는가? 그도 이런 한계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비례원칙에 대해 직접적인 검증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신중한 생활태도라는 경제윤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 원칙을 확보하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에게 신중한 생활태도란 인구와 식량의 비례관계를 확보하면서 적절한 소득분배를 유지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준'이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통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보장해 주는 경제적·윤리적 기준이며 경제논리와 윤리를 동일한 지평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근거이다. 여기서 적절한 소득분배는 궁극적으로 인구와 식량의 비례관계가 확보된 상황에서만 경제전체에 유효수요를 제공하면서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뮐서스의 윤리관은 독특한 비대칭성을 드러낸다. 그는 상층계급과 하층계급이 모두 신중하지 못한 생활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면서도 오로지 하층계급에게만 이런 생활태도를 요구한다. 그는 두 계급의 생활태도가 경제발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상층계급의 경우, 신중하지 못한 생활태도가 높은 구매력으로 이어지면서 경제를 발전시키지만 하층계급에게는 동일한 태도가 빈곤으로 이어지면서 경제발전을 방해할 뿐이다. 이렇듯 그는 '윤리에 대한 과학'을 제창하면서도 윤리나 도덕에 특정 계급의 비윤리를 허용할 정도로 스스로 자신의 윤리적 기준에서 후퇴한다. 이는 결국 윤리나 도덕을 국부증가라는 경제논리로 환원시키는 셈이다. 그에게 윤리(나 도덕)와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동일한 지평에서 사고한다는 것은 전자를 후자를 위한 목적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뮐서스에게 신중한 생활태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윤리나 도덕적인 영역을 확보한다기보다는 경제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하층계급에게 자유나 생존권을 부여하는 것조차 경제윤리 차원에서 거부하며 소득불평등을 윤리적으로 정당화시킨다. 오늘날 자유와 평등관계, 평등한 소득분배가 윤리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의 윤리관이 지닌 한계는

24) 여기서 슈페터는 뮐서스가 인구법칙과 관련해 단지 존재하지도 않는 법칙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실자료들을 편의적으로 나열했다고 혹평한다.

분명해 보인다. 그는 경제학을 ‘윤리에 대한 과학’으로 정의하면서도 윤리를 경제 발전의 도구로만 취급하기 때문에 그의 경제이론에서 윤리나 도덕은 상충제급의 비윤리를 허용할 정도로 독자적인 의미를 잃고 경제논리로 환원될 뿐이다.

參 考 文 獻

1. Beales, H.L.,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Essay on Population", in D.V. Glass ed., *Introductions to Malthus*, New York: John Wiley & Son Inc., 1953.
2. Corry, B.A., "The Theory of the Economic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 in English Classical Political Economy", *Economica*, XXV, 1958.
3. Glass, D.V., "Malthus and the Limitation of Population Growth", in D.V.Glass ed., *Introductions to Malthus*, New York: John Wiley & Son Inc., 1953.
4. Halévy, E., *The Growth of Philosophic Radicalism*, (trans. by M.Morris), London: Faber & Faber Limited, 1928.
5. Harrison, R., *Jeremy Bentham*,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3.
6. Hollander, S., "On Malthus's Population Principle and Social Reform",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18(2), 1986.
7. Le Mahieu, D.L., "Malthus and the Theology of Scarcity", in J.C. Wood ed., *Thomas Robert Malthus: Critical Assesments*, Vol.II, London: Croom Helm, 1986.
8. Malthus, T.R., "A Letter to Samuel Whitbread", in D.V.Glass ed., *Introductions to Malthus*, New York: John Wiley & Son Inc., 1953a.
9. _____, "A Summary View of the Principle of Population", in D.V.Glass ed., *Introductions to Malthus*, New York: John Wiley & Son Inc, 1953b.
10. _____, *An Essay on Population*, 7th ed., Vol. I=1958a; Vol.II =1958b, London: J. M. DENT & SONS Ltd.
11. _____, *Principle of Political Economy*, 2nd ed., New York:

- Aggustus M. Kelley, 1964.
12. Polanyi, K., *The Great Transformation*, (übersetzt von H. Jelink), Frankfurt am Main: Suhrkamp, 1977.
13. Pullen, J.M., "Malthus's Theological Ideas and Their Influence on His Principle of Population", in J.C.Wood ed., *Thomas Robert Malthus: Critical Assements*, Vol. II, London: Croom Helm, 1986a.
14. _____, "Malthus on the Doctrine and the Concept of the Optimum", in J.C.Wood ed., *Thomas Robert Malthus: Critical Assements*, Vol. II, London: Croom Helm, 1986b.
15. Rashid, S., "Malthus' Theology: An Overlooked Letter and Some Comments",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16(1), 1984.
16. _____, "Malthus' Principles and British Economics Thought", in J.C.Wood ed., *Thomas Robert Malthus: Critical Assements*, Vol. II, London: Croom Helm, 1986.
17. Rosanvallon, P., *Le libéralisme économique*, Paris: Seuil, 1979.
18. Rutherford, R. P., "Malthus and Keynes", *Oxford Economic Papers*, 39(1), 1987.
19. Schumpeter, J.A.,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ed., by E.B. Schumpeter),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54.
20. Smith, A.,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ed. by R.,H. Campbell & A.S. Skinner), Oxford: Clarendon Press, 1976.
21. Sowell, T., "The General Glut Controversy Reconsidered", *Oxford Economic Papers*, New Series, 15(3), 1963.
22. _____, "Malthus and the Utilitarians", in J.C.Wood ed., *Thomas Robert Malthus: Critical Assements*, Vol. I, London: Croom Helm, 1986.